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민주 도지사 경선 ‘양자 대결’로 재편

“김관영 지사 기반 위에 전북 전진 이어가겠다”

김관영 도지사 제명 결정 따라... 지역 정치권에 파장 이원택·안호영 2파전... 도덕성·경쟁력 중요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해 금품 제공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의 최고 수위 직계인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도지사 선거 구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전북자치도 지사 경선은 사실상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되며,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당 윤리 기구의 조사와 함께 제기된 ‘현금 제공 의혹’이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포착돼 김관영 도지사에게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당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전북 정치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직 도지사의 전격적인 내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3자 구도로 예상되던 민주당 경선이 단숨에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특히 조지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현직인 김관영 도지사 우위의 기존 구도가 무너지면서,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세력 결집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재 남은 주요 예비후보인 이원택·안호영 의원은 각각 뚜렷한 강점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청과 전북도청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을 하며 익힌 다양한 경험 등 지방과 중앙을 넘나들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간사

등 활동을 통한 정책 추진력과 정치 경력을 강조하며 ‘내발적 발전 전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조 메가 펀드로 전북 자원의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전북 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안호영 의원은 새민공에 반도체 공장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경제의 지도를 바꿀 다양한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며 정책선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특히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카이스트 남원 유치 등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토대로 지역 기반과 ‘균형 발전’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등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후보 교체를 넘어 전북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유지돼 온 전북에서, 금품 의혹과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정책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면에 계속 /1만호 기자



민주 임실군수 예비경선 결과 발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영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진보 여야 5당 정치개혁 공동 선언... 혁신당 도당 “이제 말 아닌 입법으로”

(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보장)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5당 공동선언과 관련해 “말이 아닌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강한 이행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장도상) 대변인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를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구조 개편을 위한 중대한 약속”으로 평가했다.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 질서 회복 등에 ‘방점’ 작년 2월 열린 원탁회의서 도출된 개혁 정신 계승

이번 공동선언은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2025년 2월 19일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개혁 정신을 계승해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명확히 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구체적인 실현 과제도 제시됐다.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3일 실무협의체 가동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 처리 노력 등 일찌감치 명시되며 선언을 넘어 실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전북 정치에 대한 변화 요구도 분명히 했다. 대변인은 “그동안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와 공천 중심 정치, 민심 왜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성 강화는 국민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경쟁과 책임 정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언을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도당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에서 민심 그대로 정치를 구현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1만호 기자

도, ‘반할주택’ 2단계 진안·순창 선정

상반기 중 협약 마무리 2031년 준공 목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공모사업 대상지로 진안군과 순창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개 시군 20세대 규모의 반할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는 진안군·순창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전북개발공사 주관 평가위원회가 입지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생활 인프라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차세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기회 제공

등 혜택을 갖춘 전북자치도 대표 주거 정책이다. 특히 출산과 연계한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는 주거 지원과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500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중장기 주거정책으로, 총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단계로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등 3개 시·군 320세대가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선정된 2단계 사업은 상반기 중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 모델을 구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토·일요일신문 쉽다

순창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 변화하는 혁신 의정
- 창의적인 선진 의정
- 발로 뛰는 현장 의정